

2. OECD 加入과 向後 課題

(加入條件 및 與件)

- OECD에 加入하기 위한 核心條件은 經商무역외거래(서비스 交易) 自由化 규약과 자본이동 自由化 규약의 兩大 自由化 義務事項의 遵守임
- 외형상의 우리 경제규모로 보아 OECD 加入推進은 큰 문제가 없으나 자본이동 自由化 수준은 OECD 평균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

(加入의 肯定的 측면)

- 先進國과의 圓滑한 協力關係 구축이 용이하며, 향후 새로운 다자간 國際協商(뉴라운드와 국제투자규범)의 향방을 豫測하고 우리의 입장을 사전에 반영

(加入의 否定的 측면)

- 資本市場 개방에 따른 국내 경제의 불안이 우려되고, 공적개발 원조금 및 OECD 분담금에 대한 經濟的 負擔이 가중됨
- 「開途國」 지위로 얻고 있던 이득은 OECD 加入後 축소되게 됨

(향후과제)

- 加入協商時 加入에 따른 부작용을 最小化하고 實益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協商技術과 論理의 개발
- 資本市場 개방에 대비한 巨視經濟 정책 마련

(加入背景)

- 새로운 國際經濟環境에 대처하고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必要性 증대
 - WTO 출범과 貿易秩序의 재편, 지역주의의 심화, 雙務通商壓力의 강화 등 세계경제환경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중임
 - 대외 지향적 성장정책을 계속 추진해야할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경제질서의 改編作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必要性 증가

(加入條件 및 與件)

- OECD에 加入하기 위한 조건중 핵심적인 것은 經商무역외거래 自由化 규약과 자본이동 自由化 규약의 兩大 自由化 義務事項의 遵守임
 - 정부는 3월 29일 加入 申請서를 제출, 올 하반기부터 加入條件에 대한 협의, 내년 하반기 加入案의 국내 비준후 加入시킬 예정임
 - 經商무역외거래 自由化 규약은 서비스 분야의 自由化를 뜻하며, 자본이동 自由化 규약의 의무사항 준수여부가 문제가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임

- 우리나라의 경우, 경상무역외거래 自由化 항목 57 개중 30 개, 자본이동 自由化 항목 91 개중 12 개 항목이 自由化되어, OECD 加入國의 평균 수준 (각각 50 개, 76 개)에 크게 미흡한 실정임

- 외형상의 경제규모로 보아 OECD 加入을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음
 - 한국의 GDP와 교역액 규모는 OECD 회원국을 경제수준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중간 그룹의 평균 수준을 上廻함
 - 1인당 GDP는 그리스, 멕시코, 터키보다는 많으나 하위권 평균수준에 못미침

<OECD 회원국과 비교한 韓國 經濟力>

	상위권	중위권	하위권	전체	한국
GDP(10억 달러)	2,062	240	62	824	331
1인당 GDP(달러)	26,952	19,762	9,978	17,997	7,502
교역액(10억 달러)	501	123	39	235	166
ODA규모(對GNP,%)	0.77%	0.34	0.22	0.49	0.04

주: 1) 1993년 기준, 2) 상위권은 1-8위, 중위권은 9-16위, 하위권은 17-25위 국가의 평균치 임, 3) ODA규모는 92년기준, 단 한국은 93년 기준

자료: IMF, *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*, 각호

(加入의 肯定的 측면)

- 향후 새로운 다자간 國際協商 등의 世界經濟秩序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사전에 反映할 수 있으며, 世界經濟 環境變化에 신속한 對應이 容易해 짐
 - 지금까지 세계경제질서의 개편은 주로 OECD 주축의 先進國들에 의해 논의되고 主導되었음
 - 환경·경쟁·노동·기술 라운드와 같은 뉴라운드와 국제투자규범 등이 주로 OECD내에서 논의되고 있음
- 어떤 경제블럭에도 속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가 OECD 채널을 통해 EU나 NAFTA와의 交流를 擴大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짐
 -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협의체인 APEC에만 속해 있어 국제적인 의견교류의 통로가 빈약한 실정임
- 多元的 차원에서의 協議를 통하여 雙務的 관계로 인한 압력이나 피해를 줄일 수 있음
 - 예컨대 철강,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雙務的 문제를 다자간 협의문제로 유도해 논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

(加入의 否定的 측면)

- 자본 自由化에 따른 외자 유출입의 증가로 換率變動이 심화되고 通貨會發로 인한 인플레이 압력이 커지는 등 국내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됨
- 開途國 원조 확대 및 OECD 分擔金 의무이행 등의 經濟的 負擔이 가중됨
 - 94년도에 GNP 대비 0.04%에 달하는 원조금(1.478억 달러)이 지불되었는데 향후에는 OECD 권고치인 0.7%이상으로 점진적인 증액이 요구됨
 - OECD 예산의 분담금도 부담해야함 (93년 기준으로 하면 OECD 총 예산 2억 6천만 달러의 1.4%인 4백만 달러 내외)
- 「開途國」 지위로 얻고 있는 이익은 OECD 加入後 減소가 불가피 함
 - UR 협상에서도 우리나라는 開途國 위치에 있었음
 - 작년 APEC 협상에서 얻은 우리의 開途國 위치도 차후 문제가 될 것임
 - 미국이 WTO의 相計補助金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더이상 開途國으로 인정치 않으려는 論理根據를 제공하게 됨

(向後課題)

- 加入協商時에 加入에 따른 副作用을 最小化하고 實益을 極大化할 수 있는 協商能力을 사전에 갖추어야 함
 - 서비스 및 資本市場 開放協商에서 유보와 면제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함
 - 加入 協商結果가 OECD 加入의 得실 향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
- 資本市場 自由化에 대비한 巨視經濟 政策 마련
 - 환율, 물가, 국제수지의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함
 - 특히 투기목적의 단기성 流動資金의 유출입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함
 - 투기성 短期 流動資金의 유입을 억제하고 외자유입이 실물투자로 전환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하고, 분야별 개방시기와 폭을 조정
- OECD 加入申請書를 제출한 現時點에서는 加入後의 得失을 靜態的인 관점으로 비교하는 것보다, 國家經濟 先進化를 실현하기위한 과정으로 OECD를 활용한다는 積極적 對應姿勢의 확립이 중요할 것임

(장 민 수)